

고속철 주변 정비사업 주체

대구시 누가? 철도공

◇ 대구시의회, “시가 맡을 경우...”

장점 지역기업 수주 늘어 경기 활성화
단점 사업비 증가분 떠안아 재정 부담

경부고속철 대구통과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대구시가 맡는 게 좋은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는 게 좋을지를 놓고 대구시의회 안팎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6천629억원이 되는 정비사업을 대구시가 맡아야 지역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과,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철도공단이 맡아야 대구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재준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은 “대구에서 벌어지는 중앙 차원의 사업에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20%선인데 대구시가 사업 주체가 되면 40%까지 올릴 수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구시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용성 의원(건설환경위)도 “대구시가 주체가 되면 금액이 큰 공사는 분리발주해 지역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대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대구시가 책임지는 게 시민정서와도 맞다”고 했다.

반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집단민

원과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대구시가 맡으면 늘어난 사업비를 대구시가 떠안아야 한다며 철도공단이 맡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최문찬 부의장은 “대구시가 철도청(철도공단의 전신)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시킨 대구선 이설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850억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2천800여억원까지 불어나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컸다”며 “이번에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구시가 맡으면 결국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때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해결 때도 대구시가 6천629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철도공단이 17조원의 고속철 건설 사업비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게 철도공단이 사업주체가 돼야 득이 된다는 측의 주장이다. 대구시 측은 “철도공단이 맡는 것과 대구시가 맡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다.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